

NSP

<http://www.eai.or.kr>

R

Report

National Security Panel

EAI 외교안보센터 :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 ⑰

후원

조선일보

국가안보 패널 명단

■ 위원장

하명선(서울대학교)

■ 간사위원

전재성(서울대학교)

■ 위원

김병국(EAI 원장, 고려대학교)

김성현(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현(EAI 외교안보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김현진(삼성경제연구소)

김현호(조선일보)

박종철(통일연구원)

박철희(서울대학교)

배명자(전국대학교)

서병훈(승실대학교)

손 열(중앙대학교)

신범식(인원대학교)

신성호(서울대학교)

오승렬(한국외국어대학교)

이상현(세종연구소)

이태환(세종연구소)

장 훈(중앙대학교)

정진영(경희대학교)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최 강(외교안보연구원)

함승미(연세대학교)

김하정(EAI)

정한을(EAI)

조정은(EAI)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소고(小考)



EAI

동아시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Tel No. 82-2-2277-1683

Fax No. 82-2-2277-1684

<http://www.eai.or.kr>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소고(小考)

(요약문)

발간일: 2006년 8월 23일

대표집필: 서병훈 (승실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현대 국제법은 인권문제를 국내의 울타리를 넘어 국제 사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관심사, 나아가 관할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의 일각에서 이런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그다지 효과적일 수 없다. 북한 인권 문제가 체제 유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가 원천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체제 전반에 걸친 민주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체제변화는 다른 여러 논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은 윤리적, 철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인권 문제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인류 전체의 보편적 관심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보편성이란 매우 '얇기'(thin) 때문에 조심스러운, 또는 겸허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타국의 인권상황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인도주의적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이 주도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북한은 적지 않게 당혹해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압박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정면 대응 외 다른 방안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자존심을 내세워 인권개선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의 개선 그 자체가 목적이려면, 가급적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당국이 인권 상황의 개선에 부정적,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정권유지에 대한 부담 때문이지만, 오랜 고립으로 인해 국제규범에 대한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서구적 인권 규범에 대해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인 북한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기준에 맞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북한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설득, 충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이 인권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으리라는 현실 인식도 심어주어야 한

다.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우군(友軍) 또는 동료라고 여기는 세력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 수용자세를 취한다. 적어도 그런 모양새는 갖추려 한다. 미국 정부에 대해 독립적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순수 민간단체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보다는 유럽의 인권단체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그런대로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노무현 정부, 특히 남한 내 진보진영 인사들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 보편 도덕률’에 입각, 남한 정부도 할 말은 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소고(小考)

발간일: 2006년 8월 23일

대표집필: 서병훈 (숭실대)

I. 머리말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못해 진부하기까지 한 대비---한 쪽에서는 굶주리다 못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살 빼기’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대비를 예비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과잉’이 문제가 되는데, 북쪽에서는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는 말이 설 자리가 없다. 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걸 맞는 나름대로의 인권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인권에 대해서는 쉼소리를 내며 ‘자주와 주권과 공화국의 존엄’을 읊어대는 북한의 최고 당국자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같은 하늘 아래, 손 뻗으면 닿을 지척 거리에서 북한 동포들이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저들의 참상에 대해 남쪽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못해 냉랭하기까지 하다. 이런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다. 일면식 없는 남이라고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다. 그러나 설령 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슬프게 만든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현대 국제법은 인권문제를 국내의 울타리를 넘어 국제 사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관심사, 나아가 관할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지 않

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의 일각에서 이런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적, 철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실효성도 의문이다.

인권문제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인류 전체의 보편적 관심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보편성이란 매우 ‘얇기’(thin) 때문에 조심스러운, 또는 겸허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타국의 인권 상황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인도주의적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인권 상황의 개선에 부정적,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정권유지에 대한 부담 때문이지만, 오랜 고립으로 인해 국제규범에 대한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서구적 인권 규범에 대해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인 북한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국제기준에 맞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북한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설득, 충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이 인권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으리라는 현실 인식도 심어주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우군(友軍) 또는 동료라고 여기는 세력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 수용자세를 취한다. 적어도 그런 모양새는 갖추려 한다. 유럽 등, 미국 정부에 대해 독립적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순수 민간단체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그런대로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노무현 정부, 특히 남한 내 진보진영 인사들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 보편 도덕률’에 입각, 남한 정부도 할 말은 해야 한다.

II. 북한 인권 상황의 실태

북한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에 대해 말을 덧붙인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이다. ‘내가 그곳에 살지

않는다는 것'에 크나큰 감사를 느껴야 될 정도라면, 그곳에 사는 동포의 질곡에 대해 우리가 이다지 무관심하다는 사실에 대해 큰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2005년 연례 각국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인권 기록은 '여전히 극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 보고서는 "권력이 책임지지 않는 지배자들의 손에 집중된 탓에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인권유린 국가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그 현황을 예시했다. 북한 정권은 주민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의적 처형, 고문, 납치, 실종, 정치범 수용소, 언론 자유 등 기본권 부인, 정보통제, 일부 탈북자에 대한 처형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 등 인권유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 정치범 등 15만-20만 명이 강제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북한 당국이 최근 수용소 숫자를 종래의 20여개에서 10개 미만으로 줄였으나, 수용 인원이

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2003년부터 정치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로 구분, 정치적 동기에 대해선 강제송환 됐을 경우 최하 징역 5년형부터 처형도 하고 있으나 경제적 동기에 대해선 처벌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¹⁾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192개 국가를 대상으로 자유수준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 <2006년 세계의 자유>에서 북한을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모두 최악인 '비자유국'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 모두 최저 등급인 7점(최고 점수 1, 최저 점수 7)을 받아 미얀마, 쿠바, 리비아 등과 함께 최악의 8개국에 포함됐다(동아일보, 2005-12-23).

또한 프리덤 하우스는 '세계 언론자유 날(5월 3일)'에 맞춰 공개한 2006년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이 194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쿠바 등과 같이 언론 자유 면에서 '최악 중의 최악' 국가로 분류된 것이다.(조선일보,

1)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 S. Department of the State,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Democratic Republic of Korea," March 8, 2006.

2006-5-2).

워싱턴 포스트 일요판 매거진 <퍼레이드>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와 프리덤 하우스, '국경 없는 기자회' 등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언론 자유는 세계 최악 수준이며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도 34년 연속으로 가장 나쁜 점수를 기록했다. 또 북한 주민 25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식량난이 만연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김정 일 위원장은 <퍼레이드>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최악의 독재자 순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2위에 올랐다.²⁾

통일연구원이 펴낸 <<2006년 북한인권백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식량권, 사회보장권 등), 정치범, 납북자, 탈북자 권리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일부 긍정적 변화가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심각하게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볼 때 공개처형이 자행되는 등

생명권이 턱없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개처형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현지공개재판' 조항을 따르는 듯 보이는데, 범죄행위를 폭로, 규탄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경제난이 완화되면서 그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등을 개정하여 심문(審問), 체포와 구속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체포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반범죄의 경우 법에 규정된 절차가 대부분 준수되지만, 정치범의 경우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에게 구속 여부 및 구금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정치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절차도 준수되지 않은 채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권 침해가 다른 인권침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악순환을 지적하고 있다.³⁾

2) <연합뉴스>, 2006. 1. 22.

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6>> (통일연구원, 2006).

북한 인권의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나아가 미국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정황을 종합한다면, 북한 인민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III. 국제사회의 압력

이런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결과, UN 인권위원회가 2003, 2004, 2005년 3년에 걸쳐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을 채택했고, 2005년 제 60차 UN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전 세계인의 관심을 주도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여 나 오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인권외교와 북한체제변화의 연결고리를 숨기려 하

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저항도 격렬하다는데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세계에서 폭군을 제거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 아래 민족과 문화를 불문하고 민주주의와 민주적 제도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담한 외교’, 즉, 세계 자체를 변화시킬 ‘transformational diplomacy’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⁵⁾

라이스장관은 2005년 프린스턴 대학 연설에서, 9.11 사태는 극단적 이데올로기가 폭력적으로 분출한 결과라면서 ‘문제지역’을 변화(transform)시킴으로써 테러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진정한 안정과 항구적 안전을 위한 유일한 방책이라고 천명했다 :

“민주주의를 지원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민주주의를 ‘수출’(exporting)한다고, 마치 미국이 민주주의를 제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 자신의 정치원리를 원하지도 않는 국민들에게 고압적으로 이식하려 하는 것처

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6>> 참조.

5) Condoleezza Rice 미국무장관, 2006년 1월 18일 Georgetown 대학 연설문 중에서.

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원, 언론자유가 전적으로 미국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교만의 극치를 달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이 이런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이스는 민주주의를 향한 열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몇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편적 호소에 대해 심각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압에 맞서 자유, 사적 소유권, 국민의 동의에 입각한 정치, 법의 지배와 같은 원리는 모든 사회에서 정의의 기초이고 국가간 평화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⁶⁾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IV. 북한의 발발과 변화

이런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 북한이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반응과는 달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에 대해 적지 않게 부심(腐心)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려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일단 ‘우리식 인권’ 개념을 내세워 자기방어에 나서려 한다. ‘우리식 인권’이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의 동등하고 자주적인 권리를 뜻한다. 특히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근로인민이 사회주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권이 아니라 자주권이라는 것이다.⁷⁾

이런 전제 위에,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제도 전복을 위한 정치적 음모로 규정, 결의안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은 조선외무성 대변인의 ‘<북

6) Condoleezza Rice 미국무장관, 2005년 9월 30일 Princeton 대학 연설문 중에서,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2005년 12월 19일 담화 중에서,

조선인권법안>은 대 조선 적대선언'(2004년 10월 5일) 및 '미국의 인권소동이 위험도수를 넘고 있다'(2004년 12월 21일)에 잘 나타난다.

북한은 우선 미국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권유린의 주범'이고 '초보적 인권도 보장할 수 없는 세계최대 인권불모지'로서 '자기 처지를 모르고 인류양심을 우롱'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내 인권실태를 공격하고, 이어 이라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북한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미국의 진의도가 '사회주의 제도의 붕괴를 노리는 데 있다'는 것이다 :

“인권문제를 정치화, 선택성과 2중기준적용을 일삼으면서 반미 자주적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구실로 인권문제를 고안,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부전복의 합리화에 써먹고 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이 “선 핵포기를 통해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 승산 없게 되자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

권 내세워 우리 제도전복에 나섰다”고 보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 제도를 말살하려 들면 들수록 물리적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만이 진정한 인권옹호 유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⁸⁾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대응과는 달리, 외부의 도움과 국제사회에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북한은 적어도 과거와 같은 일체의 부인과 불개입 정책에서 서서히 선회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은 구두선(口頭禪)에 가깝지만 국제기구 등의 활동에 일견 협조할 의사를 보이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러테면 유엔 '인권레짐'과의 관계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인권규약의 당사자로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인권개선을 위한 일부 조치를 취하는 듯이 보인다. 200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지난 16년간 미루어오던 2차정기보고서를 제출했고, 2001년에는 이에 대한 심의과정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질의응답에 참석했다. 2001년 '여성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2004년 12월 21일 담화, “미국의 인권소동이 위험도수를 넘고 있다” 중에서.

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 가입한 뒤, 이 협약에 따라 2002년에 최초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2005년 7월에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 아울러 UN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의 방북을 수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엔 인권레짐에 대한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은 의미 있는 태도변화라고 하겠다.

나아가, 앞에서 보았듯이, 2004년에는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 국내법을 정비하기도 했다.⁹⁾

이러한 사실들은 국제사회에서의 계속적인 추궁과 공론화가 북한의 태도를 일정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것이 북한 당국의 본질적 변화라기보다는 외부의 관심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정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더 유력한 것은 사실이다.

이 글은 북한 당국이 인권 상황의 개선에 부정적, 소극적 태도를 취하

는 것이 1차적으로는 정권유지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미국처럼 이 고리를 직접 파고드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다음 절에서 보듯이, 윤리적, 철학적으로도 온당하지 않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속성에 비추어 그나마 진전 기미를 보여 온 그간 상황을 역류시킬 개연성도 있다.

그 대신 이 글은 또 다른 측면, 즉 북한이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서 국제규범에 대한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남한 사회의 지난 경험에 비추어서도 알 수 있듯이, 서구적 인권 규범에 대한 문화적 부응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에 급진적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국제기준에 맞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북한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설득, 충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와 압박을 병행 제공하는 것이 물론 필요할 것이다.¹⁰⁾

V.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개

9)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6>>.

10)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6>>, p.16 참조.

입의 정당성

1) 국제법상 인권 문제 : 보편적 관심사

원래 특정한 나라의 인권은 그 국가 고유의 국내문제로 간주되어 왔었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인권문제는 국내문제의 성격을 벗어나 국제 사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1945년 유엔헌장 제1조는 유엔에게 ‘인종과 성과 언어와 종교의 차별 없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권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권문제 국제화의 토대와 발판을 마련하였다.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고, 이어 1966년에는 법적 효력을 지닌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그 이후 인권문제는 점차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북한이 아무리 국내문제라고 주장하고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더라도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특정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

제기구가 문제 삼으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건, 즉 1) 현저한, 중대한, 또는 극악한 침해 2)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침해 3) 일관된 형태를 갖춘 침해 라는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또는 심각하지 않는 인권침해는 국제기구의 관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재까지의 추세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볼 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

2) 철학적 논의 : 최소보편강령

그러나 현대 철학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진다. 진리니 거대담론이니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시들해지는 세상에서 국경의 울타리를 넘는 보편적인 가치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¹²⁾ 프랑스 여배우가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 인도의 ‘비인간적인’ 카스트 제도에 대해 외국

11) 박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연계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제문, 1997년 참조.

12) 이런 점에서 ‘보편적 인간성’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로티(Richard Roty)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엄정식, “인권의 이념과 정치현실”, <<철학과 현실>>, 2006년 봄 호, pp.14-15 참조.

인들이 문제삼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매년 북한과 중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든 나라를 구속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권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각국 인권상황의 우열을 가리겠는가? 아닌 말로 ‘너나 잘 하세요’ 식의 냉소적 반응을 보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¹³⁾

이 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우격다짐으로 개입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장 위에서 있다. 그런 방식이 실효성을 가지는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보편적 규범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실태에 대해 판단하고 나아가 비난,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이든 스스로 돌아보아서 부끄러운 측면이 없을 수 없다면, 그런 처지에서 타국에 대해 군림하듯 특정 도덕적 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우면서 내면적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찰시킬 계산이라면 더구나 용인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이 글은 가치와 문화의 보편성을 부인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공동체주의자들도 최소한의 보편적 국제규범은 인정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자(communitarian)들은 인간이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규정되고, 가치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곧 인간을 규정하는 잣대가 된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가치가 각 공동체 특유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하는 문화 상대주의 입장을 도출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한 사람은 왈저(Michael Walzer)이

13) 중국 국무원은 미국의 인권보고서 발표에 맞서 미국의 인권상황을 혹평하는 ‘미국 인권기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스스로의 인권문제를 직시하고 자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동아일보, 2006-3-9). 북한도 이라크 침공을 예로 들면서, “인권유린의 주범으로 낙인되고 있는 미국이 아직도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가타부타하는 것은 인류의 양심을 우롱하는 도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외무성 대변인, 2004년 10월 5일).

다. 그는 최소강령적 보편적(thin) 도덕률과 문화구속적 특수(thick) 도덕률을 구분한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 나름대로의 특수한 도덕률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적 상대주의가 비롯된다. ‘보신탕’을 음용하는 한국 고유의 전통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치 중에는 문화적 국경을 넘어 보편성을 띤 것도 없지 않다. 이를테면 살인이나 사기, 고문, 인권 탄압 같은 현상은 사회나 전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부정적 가치이다. 또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사람은 모두가 ‘정의’를 소중히 가치로 상정한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자비한 살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 지향이 모인 것이 최소강령적 도덕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도덕적 에스페란토’(moral Esperanto)와 같다. 문화적 특수성을 뛰어넘는 보편적 도덕 언어인 셈이다.

왈저는 그 근거로 인간성(humanity)을 제시한다. 사회는 불가피하게 특수성을 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는 사람(members)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기억(memories)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성은 단지 사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의 기억이 전제하는 역사나 문화, 관습으로부터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 인간성은 공동체 특유의 공유 인식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는 매우 희미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구체적 삶의 와중에서 가치 기준으로 상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구체적 가치판단은 각 사회 속에서 두텁게 존재하는 도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에 보편적 가치는 문화적 국경을 넘어 다른 사회로 ‘번역’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 에스페란토’도 각 특수 문화로부터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사회의 가치 속에 이미 용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가 잔인한 고문을 자행하는 관습을 고수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사회의 특수 문화 속에 잠재해 있는 보편적 도덕률을 위배하는 셈이 된다. 바로 이 보편성을 근거로 하여 다른 사회에 대한 설득, 나아가서는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왈저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서 있으면서도 다

른 문화의 의미에 대해 판단,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열어 놓고 있다. 문화적 국경을 넘어 ‘최소한의 보편적 도덕률’(minimal and universal moral code)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도덕률을 침해하는 사회적 관행은 외부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회가 자신의 사회적 의미에 입각해서 다른 사회의 가치 체계가 변화되도록 설득해야지 강제로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¹⁴⁾

이런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최소한의 보편적 인권규범마저 존중하지 못하는 현실은 주권의 영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가 되어야 마땅하다. ‘자주권 운운’할 계제가 못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제3국이 도덕적 우월감을 품고서 북한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북한 당국자를 보편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속적 도덕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VI. 남한 진보진영의 역할

평소 대학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이지만, 총학생회 등 운동권 학생들은 교수나 학교 당국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무리 타당하고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적대적 자세를 취하기 일쑤다.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어깃장을 놓는다. 그러나 주변 학생들이 가볍게 던지는 한두 마디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동료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우군(友軍) 또는 동료라고 여기는 세력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 수용자세를 취한다. 적어도 그런 모양새는 갖추려 한다. 그 나름대로 정당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경험이 머리에 떠오른다. 북한 체제야말로 특유의 이데올로기로 뚝뚝 뭉친 집단이다. 외부의 논리가, 국제사회의 통상적인 규범이 적용되기 어렵다. 하물며 북한 사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체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14)Michael Walzer, *Thin and Thick* (Notre Dame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pp. 5-8 ; Walzer, *Interpretation and Social Criticism*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 24.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이 아무리 공자 같은 말씀을 내세워 인권 문제를 압박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고분고분 수용할 수가 없다.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한편, 이 글은 북한이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나서기는 해도 결과적으로는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이 팔목상대(刮目相對) 하지 않을 수 없는 집단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이면에는 미국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체제에 대한 위압적 접근을 수정하지 않는 한, 북한으로서는 오기로라도 버티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는 미국식 공세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하면 유럽 각국의 정부

와 시민단체의 인권 압박에 대해서는 북한도 막무가내로 외면하기가 어렵다. 미국과는 달리 인도주의적 순수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이 중심에서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실효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겨레신문, 2006-3-28 참조).

같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개진과 역할이 필요하다. 남한 사회 내 진보 세력도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남한 정부, 특히 진보진영의 인사나 단체가 소극적 자세를 취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해 적개심까지 표명해왔다.¹⁵⁾ 이 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철학적, 국제법적 관점에서 그러한 '의도적 방관'을 비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인권공세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이든, 북한 주민들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최소한의 인권마저 향유할 수 없

15) 박경서 정부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에 대해 "북녘의 인권을 논할 때에 '한반도 평화권'이라는 인권을 우선순위에 놓고 얘기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유엔에서마저 북한의 인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사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인권마저도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고,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 해버린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인사는 '미국처럼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체제전복 의사를 배제하지 않으면 북한이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한겨레신문, 2006-1-20).

는 현실에 대해서는 공분을 느껴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처사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는 비겁하고 비인도적인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 당국자나 진보진영 사이에서 점진적 변화의 기미가 보인다. 진보적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포용정책을 강화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제3의 대안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한겨레신문, 2006-1-2).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중 잣대'를 갖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진보진영 인사들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해, 진보진영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절실하다는 인식이 넓혀지고 있다. 나아가 북한 스스로 민주주의를 추구할 물질적 토대나 인권 향상을 위한 시민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남한의 진보세력이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이들도 미국의 노골적인 북한 압

박에 대해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유엔과 유럽 사회의 도덕적 압박은 일정하게 북한 당국의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북한이 2004년 형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이 숨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의미심장한 변화이며, 이것을 이끌어내는데 '중립적 또는 우호적' 국제사회의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한겨레신문, 2006-3-28).

VII. 맺는 말

북한 인권 문제가 체제 유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가 원천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체제 전반에 걸친 민주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체제변화는 다른 여러 논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이 주도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북한은 적지 않게 당혹해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압박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정면 대응 외 다른 방안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자존심을 내세워 인권개선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의 개선 그 자체가 목적이려면, 가급적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중요한, 그러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간과해온, 사실은 북한 체제가 서구적 의미의 인권 개념에 대해 매우 ‘낮설다’는 점이다.¹⁶⁾ 1970년대 한국 사회를 돌이켜보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불필요하게’ 국제사회에서 인권불량국가로 인식된 측면도 있다. 최근, 북한이 서구적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 것을 굳이 폄하할 이유가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의

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기에는 북한의 여러 사회문화적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는 점도 인정해주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된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면, 북한도 국제사회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¹⁷⁾ 그렇다면 북한이 우군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보다는 유럽의 인권단체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 정부와 남한 내 진보진영 인사와 단체들이 그동안의 소극적 방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오매불망(寤寐不忘) 내세우는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규탄받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1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6>> 참조.

17) 이를테면 한국의 법조계 인사들이 북한의 형법 등 각종 법률체계의 정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이라고 ‘불필요하게, 아무 의미 없이’ 인권을 유린해야 할 이유는 없다.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분야의 개선에 굳이 무관심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EAI 국가안보패널 NSP 보고서 시리즈 소개”

1.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 · 전재성 2004. 6. 17)
2.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김성한 2004. 8. 4)
3. 주한미군 재배치와 21세기 한국의 신안보전략개념 (한용섭 2004. 9. 24)
4. [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 · 전재성 2004. 10. 22)
5. 2004 미국대선과 한반도 (장 훈 2004. 11. 1)
6. 북한체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신성호 2005. 1. 26)
7. 일본의 안보선택과 한국의 진로 (박철휘 2005. 3. 22)
8. 21세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태환 2005. 5. 25)
9. 정보화시대의 군사제국: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네트워크
(이상현 2005. 10. 04)
10. 미국의 동아태 전략 : 변화와 지속성 (김성한 2005. 11. 17)
11. [제2차 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평가와 전망
(하영선 · 전재성 2006. 1. 2)
12.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FTA 전략: 참여정부의 FTA 정책 평가
(정진영 2006. 1. 2)
13. 확산안보구상(PSI)과 한반도 (신성호 2006. 1. 25)
14. 한반도 평화체제 (전재성 2006. 7. 3)
15. 북핵과 강압외교 (신성호 2006. 7. 12)
16. 북미관계정상화 (박종철 2006. 8. 23)
17.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소고 (서병훈 2006. 8. 23)

18.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 (오승렬 근간)
19. 한반도 평화 로드맵 (하영선 근간).

국가안보패널보고서 17호 부/록/안/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소고(小考)"

<부록1> 미 백악관 자료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September, 2002

(<http://www.whitehouse.gov/nsc/nss.pdf>)

<부록2> 미 국무부 자료

Condoleezza Rice, "Transformational Diplomacy," Georgetown University Speech,

Washington, DC

January 18, 200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6/59306.htm>)

Condoleezza Rice, Princeton University's Celebration of the 75th Anniversary of the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New Jersey

September 30, 2002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5/54176.htm>)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 2005,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ch 8, 2007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5/61612.htm>)

<부록3> 북한 발표자료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북조선 인권법안>은 대 조선 적대적 선언,”

2004년 10월 5일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인권> 소동이 위험도수를 넘어서고 있다,”

2004년 12월 21일

조선외무성 대변인, “반 공화국 <인권> 소동에 핵 억제력, 자위적 국방력 강화,”

2005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대화를 파탄시키려는 것인가 - <북조선인권대회>,”

2005년 7월 21일